

현안과 과제

새정부 경제 정책의 기대 효과와 정책 제언
〈별첨〉 201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당선

○ (대선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높은 투표율에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18대 대통령으로 당선

-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577만 표를 얻어 51.6%의 득표율로 당선
 - 18대 대선의 투표율은 75.8%로, 17대 대선의 63.0%, 16대 대선의 70.8%를 크게 상회
 - 세대별·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비교적 고른 계층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음

○ (박근혜 후보 당선 의의)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첫 과반 대통령

- 박근혜 당선자는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여권(女權)을 신장하고 양성평등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
-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첫 과반 대통령이자 사상 처음으로 1,500만 표 이상을 득표한 대통령으로서, 광범위한 지지를 업고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

○ (당면 과제) 경기 둔화와 양극화 심화, 삶의 질 악화, 남북대화 단절 등 산적한 과제가 박근혜 당선자를 기다리고 있음

- 경기 둔화 : 민간소비 위축, 건설 및 설비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둔화
- 양극화 심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취약계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 확대
- 삶의 질 악화 : 높은 체감물가와 청년실업률, 남녀 불평등, 각종 범죄 및 재난사고로부터 국민들이 위협받고 있으며, 낮은 출산률과 높은 자살률로 귀결되고 있음
- 남북관계 경색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고 있음

2. 근혜노믹스의 주요 경제 정책¹⁾

○ (비전과 국정운영 기조)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시대교체를 이루고, 이를 위해 국정운영 기조를 성장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

- 문제의식 : 과거에는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으나,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의 고리가 단절되어 있음
-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의 고리가 끊어진 시대에서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

< 근혜노믹스의 주요 경제정책 >

정책	주요내용	문제의식(배경)	
비전	·국민행복시대(시대교체)		
국정운영 기조	·성장에서 삶의 질로 전환함으로써 성장의 혜택을 국민 전체로 전파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의 고리 단절로 격차확대 및 불균형 심화	
정책목표 및 3대 정책방향	·목표: 중산층 비중 70%로 복원 ·3대 정책방향: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고 저소득층의 중산층 상승기회 차단	
주요 정책 과제	경제민주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 실현	·공정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격차확대 및 성장잠재력 저해
	일자리	·일자리 중심의 새로운 성장방식: 창조경제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동시 달성 ·비정규직을 OECD 평균수준으로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 차별 등으로 고용시장 왜곡
	복지·재원	·재정건전성 下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경제-복지 선순환 ·예산절감 등으로 연 27조원씩 조달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 낮은 체감도 ·재정건전성 해치는 복지 확대는 부담을 후손에 떠넘기는 것
	남북경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경제적 교류협력 상호보완적 발전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함 ·호혜적 협력사업 재개요구 증대

1) 박근혜 당선자의 출마선언문, 방송연설문, 공약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기초로 정리

- **비전** : 국민 개개인의 꿈을 향한 노력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 발전이 국민 행복으로 선순환 되는 국민행복시대 개막
 -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 중산층 비중 70% 복원을 제시
 -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을 설정

 - **국정운영 기조** :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전환
 - 국정운영 기조를 성장에서 삶의 질로 전환함으로써 성장의 혜택을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 **(경제민주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성장의 혜택을 국민 전체에 확산**

 - **문제의식** : 그동안 한국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
 - 그 결과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되며 성장잠재력이 저해됨

 - **공정거래 중심의 경제민주화** : 정당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2)
 - 대기업의 과도한 업종다변화를 제한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로부터 골목상권 지키는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 대기업의 불법적·탈법적 사익편취행위 근절,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소액주주 권한 확대(집중투표제, 주주대표소송제) 등을 통해 대기업의 책임성 강화
- 2)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꾸준히 주장하던 '줄·푸·세'와 일맥상통함

○ (일자리) 창조경제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 차별 없는 고용시장 구축

- 문제의식 :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새로운 성장방식을 고민할 시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로 고용시장이 왜곡되고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추락

- 신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융합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세계적 혁신기업과 혁신기술을 발굴. 이를 위해 국가 R&D 예산을 GDP의 5%까지 확대
 -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 이를 위해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체제 구축

- 차별 없는 고용시장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고용시장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춤
 -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 정착. 공공부문부터 전환하고, 대기업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유도
 - 대기업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토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 개선

○ (복지·재원)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문제의식 : 복지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
 - 국가재정을 고갈하면서까지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복지 부담을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것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 한국 실정에 맞으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
 - 복지가 국민 개개인이 가진 자기 역량을 뒷받침하고 끌어내서 자립·자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축

- **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 조달** : 복지 확대를 위해 5년간 연평균 27조원씩 조달하고,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 추진
 - 정부예산 절감 및 불필요한 사업 정리로 소요재원의 60% 마련
 -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40% 조달

- **(남북경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

- **문제의식** :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함
 - 기존의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 부족
 -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호혜적 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요구 증대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원칙 있는 포용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하며, 구체적으로 인프라 확충, 국제투자 유치, 3각 협력(남북중, 남북러)을 추진
 -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를 진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
 -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여,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후 재개

3. 기대 효과와 정책 제언

□ 기대 효과

- (경기 활성화)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부채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기업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 기여
 - 소비심리 회복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로 근로소득이 상승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소비심리 회복
 - 가계부채 연착륙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으로 내수경기 회복
 - 투자심리 회복 : 공정거래 중심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정당한 기업 활동이 보장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되면서 투자 환경 개선
 -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으로 새로운 경쟁력 창출 기대
 - 재정지출 확대 : 2013년 초 경기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예상
 - 선거 기간 내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를 약속한 바 있으며, 국회가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
- (성장잠재력 제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좋은 일자리 창출, R&D 투자,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잠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창조경제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곧 한국 경제가 '일자리창출형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되어 성장잠재력이 강화됨'을 뜻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R&D 예산을 GDP의 5%까지 확대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신경제체제 구축) 성장과 일자리창출,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체제로 전환되어, 효율성과 공정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 기대

-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 :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
 - 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생산을 위해 고숙련 근로자가 필요하고, 결국 임금이 높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성장-일자리의 선순환 가능
- 지속가능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체제 구축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여 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고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 복지가 개개인의 역량을 뒷받침하고 다시 성장을 일으키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예산 효율성 제고 및 세제 개편으로 조세정의 실현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이 국민 전체로 파급될 것으로 기대
 -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함께 공정성이 보장되면서, 승자 독식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 기대

○ (남북경협 확대) 당국간 대화 재개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기 합의된 사업의 이행과 경협이 법·제도화 진전이 이뤄져 남북경협이 한 단계 도약 기대

- 사업 활성화 : 남북 위탁가공교역과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등의 기존 사업은 물론, 상호 신뢰가 진전될 경우에는 남북경협이 크게 확대될 전망
 - 개성공단 2~3단계 사업 추진과 나선 특구 진출 모색, 남북한 지하자원 협력,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통합 교통망 구축과 가스관 부설 추진 예상
- 경협이 법·제도화 진전 : 당국간 회담의 재개와 정례화, 서울·평양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신변안전보장은 물론 3통과 4대 경협합의서의 실질적 이행 등
 - 3통은 통행, 통신, 통관을, 4대경협합의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합의서를 뜻함

□ 우려점과 정책 제언

○ (우려점) 새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내용과 일자리 질 개선방안, 재원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 상존

- 과도한 대기업 규제로 대기업의 투자·고용이 위축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설정 및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를 둘러싼 불협화음 우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노·사·정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등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놓고 노·사·정의 이해 상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처우 개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최저임금 상향조정 등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 존재
-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식과 복지 혜택의 우선순위를 둘러싸고도 계층간 갈등 확산 가능성 존재
 - 비과세 감면 축소, 금융소득 과세,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 사업 축소 등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반발 예상
- 부채감면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 우려도 증가
 -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부채 감면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향후에도 부채탕감이 시행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형성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부작용 우려
- 정치·군사적 상호 신뢰 진전을 남북경협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할 경우, 현재의 경색 국면과 경협 중단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특히 미·중의 새정부 출범과 일본의 우경화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새정부 초기의 남북간 기싸움은 경색 국면을 장기화시킬 우려 존재

○ (정책 제언)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려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중요

- 경기 반등을 위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가장 시급한 민생 대책임
 - 최근 내외수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이 경우 일자리 감소로 민생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³⁾
 -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이 인내할 수 있는 속도로 공정거래 및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정책을 시행
 -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여력을 개선하는 재정 확대
- 경제정책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새정부가 앞장서 원활한 소통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발휘
 - 기 공약한 '국민대통합위원회', 혹은 이에 준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복지 및 재원조달방안을 놓고 인내심 있게 조율
-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전환과 경협·인도적 지원 등의 비정치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추구
 - 남북경협을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 아니라 내수경기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북한 변화의 결과가 아닌 '수단과 과정'으로 활용
 - 중국-대만의 사례처럼 선경후정(先經後政)의 관점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치군사적 상호신뢰 구축에 크게 공헌할 것임
- 여야의 공약이 일치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는 민생대책은 시급히 국회 동의를 거쳐 시행
 -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민생대책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2013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
 - 특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말에 종료되면서 부동산거래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대책의 경우, 임기 100일 이내에 조기 입법화하고 집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신뢰 제고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임희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3) <별첨> 201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참조

<별첨> 201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경제 전망 수정의 배경

○ (세계 경제 위축 지속) 2013년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 회복세가 지연되는 양상을 보임

- 선진국 :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미국 경기 회복과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 위기 지속 등으로 2013년에 1%대를 기록할 전망
- 신흥개도국 : 2013년에 신흥개도국 경제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2012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나 회복세는 미약하여 5%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
-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하향 조정

< IMF와 OECD의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2011년	2012(E)				2013년(E)			
		OECD		IMF		OECD		IMF	
		'12.5	'12.11	'12.7	'12.10	'12.5	'12.11	'12.7	'12.10
세계	3.8	-	-	3.5	3.3	-	-	3.9	3.6
선진국	1.6	1.6	1.4	1.4	1.3	2.2	1.4	1.9	1.5
미국	1.8	2.4	2.2	2.0	2.2	2.6	2.0	2.3	2.1
일본	-0.8	2.0	1.6	2.4	2.2	1.5	0.7	1.5	1.2
유로존	1.4	-0.1	-0.4	-0.3	-0.4	0.9	-0.1	0.7	0.2
신흥개도국	6.2	-	-	5.6	5.3	-	-	5.9	5.6
중국	9.2	8.2	7.5	8.0	7.8	9.3	8.5	8.5	8.2
인도	6.8	7.3	4.5	6.1	4.9	7.8	5.9	6.5	6.0
아세안5	4.5	-	-	5.4	5.4	-	-	6.1	5.8

자료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 Oct. 2012. 2) OECD, Economic outlook, May & Nov. 2012.
 주 : OECD의 선진국 전망치는 OECD 국가 평균 성장률임.

○ (국내 경기 침체 심화) 소비와 투자를 포함하는 내수 경기도 이전 시점보다 악화됨

- 2012년 국내 경기 침체 상황이 갈수록 심화됨
 - 경제성장률은 2012년 3/4분기 전년동기비 1.5%, 전기비 0.1%로 예상보다 부진
 - 민간소비는 1%대 증가율에 머물고 건설 및 설비투자는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수출 증가율 역시 11월까지 -0.9%에 머물
- 민간소비 부진과 건설 및 설비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세계 경기 둔화에 의한 수출 회복이 미흡할 전망
- (수정 전망) 2012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2.5%에서 2.2%로, 2013년은 당초 3%대 중반에서 3%대 초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주요 경제 지표 수정 전망 >

(2012년 12월 21일 현재)

구 분		2011	2012(E)	2013(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3.6	2.2	3.1
	민간소비 (%)	2.3	1.6	2.5
	건설투자 (%)	-5.0	-0.4	2.2
	설비투자 (%)	3.7	-0.7	4.8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5	390	285
	무역수지 (억 달러)	308	302	277
	수 출 (억 달러)	5,552	5,535	5,845
		(증가율, %)	19.0	-0.3
	수 입 (억 달러)	5,244	5,233	5,568
		(증가율, %)	23.3	-0.2
소비자물가(평균, %)		4.0	2.2	2.5
실업률(평균, %)		3.4	3.3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26	1,060